

특별호

『민주화운동사전』 편찬의 학술적 의의와 역사 대중화 모색

고지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선임연구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현대사 전공.

냉전사 연구방법론으로 1960~1970년대 한국민주화운동사,

인물사 연구를 계속해 왔으며 현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민주화운동사전』 편찬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사전』 편찬의 학술적 의의와 역사 대중화 모색

고지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선임연구원

이 글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온라인 플랫폼 형식으로 편찬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사전』의 주요 개념, 편찬체계, 집필원리 등을 소개함으로써 역사 대중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쓴 글이다.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는 ‘과거’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이 민주주의란 현재에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추구되는 ‘삶의 양식’이란 점에서, 『민주화운동사전』은 민주화운동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과거 민주화운동의 경험과 기록을 공유하고, 민주화를 추구했던 사람들의 고민과 행동을 기억·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사전』 편찬의 의의와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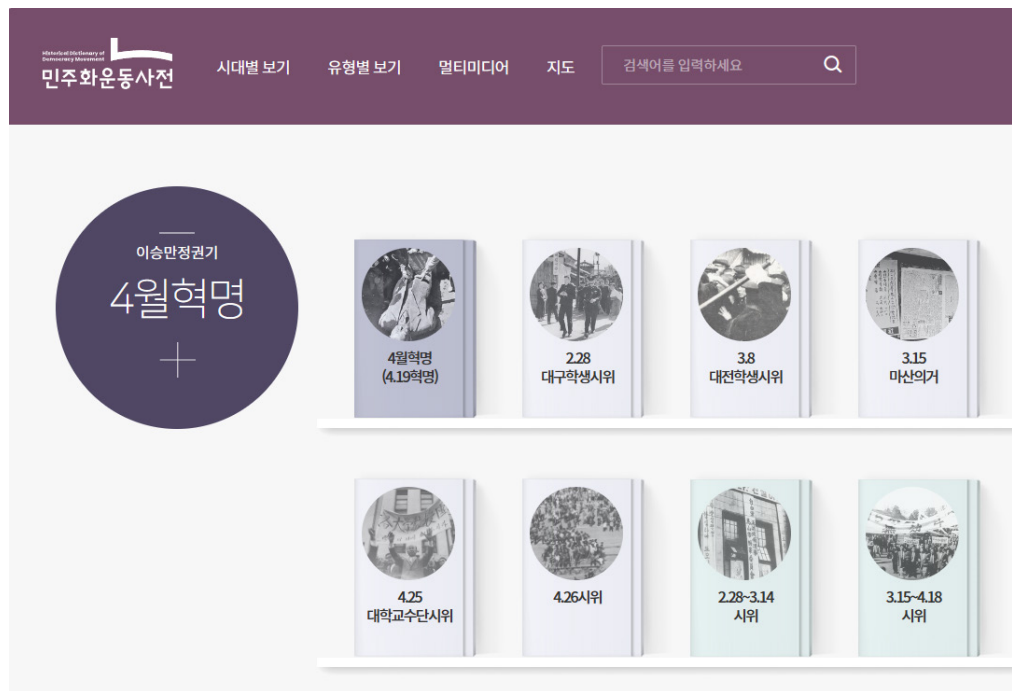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인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로 지난 2001년 공적 기구로 출범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그동안 한국민주화운동의 역사 정리 보존사업,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와 민주시민교육, 세계 민주주의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민주주의 확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사업회가 2019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온라인사전 형식으로 시범 운영 중인 『민주화운동사전』은 1960년 4월혁명부터 1993년 2월 문민정부 수립 이전 시기까지 권위주의 국가통치에 저항해 민주주의 제도 실현을 위해 전개해 온 민주화운동 사건, 단체, 인물 등을 사전항목으로 개발해 구축해 오고 있다.

민주주의는 어느 순간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기보다는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지향점이자, ‘생활양식’이다. 민주화를 추구하는 과정은 비단 정치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교육 등 일상의 전 영역에 걸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실현 영역은 부단히 확대되어야 하며 거기에 참여하는 주체도 계속 확장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화를 추진해왔던 사람들의 고민과 행동을 기억하고, 공감하는 세대 간 전승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디지털 시대 정보전달 환경이 온라인 플랫폼 형식으로 바뀐 요즘 민주주의의 기본 정보들을 손쉽게 접근하고, 학교 교육 또는 시민사회 영역에 민주화운동의 경험을 공유,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학교 교과과정에서도 과거에 비해 한국근현대사 서술비중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민주화운동의 경험 부재로 전달 방식과 이해 정도는 매우 복합적이다.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는 ‘과거’를 필요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화운동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과거 민주화운동의 경험과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성장 기록을 전승할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 더욱이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 전 지구적 삶이 가능해진 지금 한국 민주주의 성취 경험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해 왔고, 현재에도 민주주의 성취 과정에 있는 국가 및 시민사회들에게 민주화운동 경험의 공유를 통해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안팎으로 제기되는 필요성에 따라 사업회는 온라인콘텐츠 『민주화운동사전』 편찬·구축을 통해 그동안 축적된 민주화운동의 성과와 자료, 가치들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대중적으로 확산함으로써 민주주의 교육과 민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1> 『민주화운동사전』 <https://dict.kdemo.or.kr>



『민주화운동사전』의 구성 체계와 집필 원리

『민주화운동사전』 편찬작업은 학술적 엄밀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역사, 정치, 사회학 등 관련 분야 전문 학자들로 구성된 사전편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2020년 7월 출범한 『민주화운동 사전편찬위원회』(1대 서중석 위원장, 2020.7.~2023.5.)는 현재 정근식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사전편찬위원회는 매월 정례 학술회의를

통해 『사전』 집필체계, 방향을 논의하고 사전항목, 집필자 선정 등의 편찬하고 있다(<표1> 사전편찬위원회 현황 참조). 사전편찬위원회가 제정한 『민주화운동사전』편찬요강을 기준으로 주요 개념과 집필체계, 구성원리 등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표1> 민주화운동 사전편찬위원회 현황(2023. 11 현재)

구분	이름	소속(직책)	비고
편찬위원장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사회학
편찬위원	이희영	대구대 교수	사회학
"	홍석률	성신여대 교수	역사학
"	허은	고려대 교수	역사학
"	이정은	창원대 교수	사회학
"	김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정치학
"	오제연	성균관대 교수	역사학
"	전재호	서강대 교수	정치학
"	이영제	연구소 소장(당연직)	정치학

1. '민주화운동' 정의 및 구축 시기

『민주화운동사전』은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민주주의 제도 수립에 기여한 운동과 활동'으로 제시하고 초대 이승만 정부에서 노태우 정부에 이르는 30여 년 간 민주주의 제도 수립에 기여한 사건, 단체, 인물을 수록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사전』이 제시한 '민주화운동' 개념은 현행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민주화운동'의 개념과 사전편찬위원회의 학술 논의를 통해 그동안 축적되어 온 학술연구 성과를 포괄적으로 반영한 개념이다.

『민주화운동사전』의 구축하는 대상 시기는 '민주주의 신장 활동이 처음 전국적으로 표출된 1960년 4월혁명'부터 '절차적 민주화가 본격화된 1993년 2월 문민정부 수립 이전'까지로 하였다(『민주화운동사전 편찬요강』 제1조 '정의' 및 제2조 '편찬 목적'참고). 구축 대상 및 시기 범주는 한국사회 민주화 이행에 대한 다음의 정의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 민주주의는 '목표형'이 아닌 부단히 추구해야 할 진행형의 과제로, 현재도 일상의 민주화를 위한 활동과 운동이 지속되는 전제를 반영한 것이다. 둘째,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화 과정에서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가 정권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훼손되었거나 헌정질서를 왜곡 또는 유린, 중단함

으로써 인간의 기본권 신장에 역행했던 시대를 '권위주의 통치기'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시민적 항거와 저항을 민주화운동의 지표로 제시하였다.

2. 『민주화운동사전』의 구성체계 및 집필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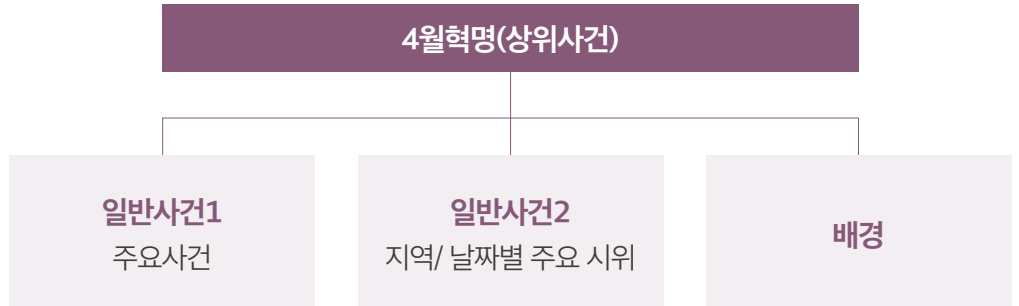
『민주화운동사전』의 집필 체계는 '시대→시기→상위사건→사건(일반·연관)→배경'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시대는 집권기를 중심으로 '○○○정권기'로 제시하였다(예, 이승만정권기, 박정희정권기 등). 시대별 시기 구분은 민주화운동의 주요 흐름을 따라 '○○○운동'으로 명명하였다(예, '4월혁명기민주화운동', '한일회담반대운동', '긴급조치이전 반유신운동' 등). 『사전』에서 '사건'은 집필의 기초단위로, 상위사건과 일반사건, 연관사건, 배경, 단체 등의 중층구조로 편제하였다.

<표2> 『민주화운동사전』 집필체계 및 원리

구분	내용	예시
시대	정권별 구분	· 이승만 정권기 · 박정희 정권기
시기	운동사적 시기 구분	· 4월혁명기민주화운동 · 군정기 민주화운동
상위 사건 (사건 범주)	민주화운동 사건 중 혁명, 항쟁 등 대사건에 해당하는 사건 · 대규모, 장기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사건 · 개헌, 체제 변동 등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건(교과서 반영 등)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명시된 사건	· 4월혁명 · 한일회담반대운동
	(사건 범주) 하나의 사건으로 묶을 수 있는 사건 단위 · 개별사건보다 큰 범주, 운동의 맥락,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서술	· 학원병영화반대운동 · 1971년선거투쟁
사건	『민주화운동사전』의 기본 단위 · 상위사건(범주)에 포함되는 개별 또는 일반 사건 · 상위사건 또는 사건범주로 묶이지 않는 개별사건	· 3.15마산의거 · 군정연장반대운동 · 전태일분신사건
연관 사건	·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또는 과거사 범주 사건 · 상위사건 또는 개별사건과 연관된 주요 사건	· 동백림사건 · 김대중납치사건

위의 집필체계와 구성, 항목 원리에 따라 1960년 ‘4월혁명’의 경우 아래와 같은 중층구조로 편제되었다.

<표3> 집필항목 구조_사월혁명(사례)



집필체계	사전항목	
상위사건	4월혁명	
사건	주요 사건 · 2.28 대구민주화운동 · 3.8 대전민주의거 · 3.15의거 · 4.11 2차마산 시위 · 4.18고대생 피습사건 · 4.19시위, 4.26시위(이승만 하야)	법률적, 학술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운동
지역/ 날짜별 시위	· 2.28~3.14 시위: 2.28~3.15 이전 날짜/지역/학교별 시위 양상 · 3.15~4.18 시위: 3.15 마산 지역 외~4.18 고대시위 외 시위 양상 · 4.19~4.26 시위: 4.19 이후 전국단위 시위 양상	(전국단위)날짜/지역별 시위 전개항목화
배경	· 3.15부정선거	4월혁명의 배경

『민주화운동사전』은 과거 권위주의 국가통치에서 국가폭력에 의해 발생한 각종 인권침해, 과거사 진실규명 사건들의 경우 「편찬요강」의 사전 정의에 따라 항목화 기준을 마련하여 항목으로 선정해 왔다. 이 기준에 의하면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들의 경우 ‘민주주의 제도 수립에 기여한 운동 및 활동’에 의거하여 **1) 과거사 진실규명작업을 통해 규명이 완료된 사건을 기준으로, 2) 인간의 기본권 신장 및 민주주의·인권제도화(제도개선)에 기여한 사건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전항목(연관사건)화 할 수 있으며,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함(선정 기준).

- 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화위 1~2기, 군의문사진상규명위, 국가정보원과거사진실위 등 공적으로 생산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건이 확인되는 경우
- ② 재심 청구나 법률적으로 무죄 규명이 확정된 사건
- ③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는 사건
- ④ 사회적 파장 면에서 인권 제도개선 인식 및 요구가 확산된 경우 (단, 논쟁적이거나 미제 사건은 제외)
- ⑤ 사건의 발생 시기보다 사건화된 시기를 기준으로 항목화

3. 『민주화운동사전』집필 시스템 및 메타데이터 구조

『민주화운동사전』 원고 집필은 메타데이터 양식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였다. 메타데이터 구조는 「식별영역」, 「배경영역」, 「내용영역」, 「인정영역」, 「기념계승영역」, 「연계영역」, 「주기영역」, 「기술통제영역」, 「열람 및 이용조건」, 「언어 및 문자(소통영역)」 등 10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 집필 내용과 구성은 아래와 같다.

<표4> 『민주화운동사전』 메타데이터 구조

영역	서술 원칙	
① 식별 영역	유형	민주화운동 '사건' 또는 '단체'
	분류	민주화운동 분류-사회, 노동, 학생, 농민, 통일운동, 정치운동 등
	대표사건명	법률적, 학술적으로 인정하는 대표적인 명칭 표기
	동의어	동의어 표기, 해당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유사어/별칭/이칭	대표어, 동의어 외 약어, 별칭, 소수 의견 표기. 해당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영어표기	외국어 표준에 따라 영어 표기
	한자표기	한자 표기
	발생일	사건 발생일 표기 ex) 1964-06-03
	종료일	사건 종료일 표기 ex) 1964-06-03
	시대-시기	예) 박정희정권기-제3공화국기
	지역	사건 전개 지역 표기 · 사건 발생·전개 지역을 시(구)·군까지 기입 · 옛 지명의 경우 ()에 현지명 표기
	개요	200자 이내(띄어쓰기 공백 포함)

② 배경 [(하위)사건]을 포괄하는 시대상황을 종합적으로 서술

영역

- 배경 서술 : 시대 상황
일반적인 시대 상황보다 해당 사건에 대응한 '민주화운동' 배경에 초점을 맞춰 시대 상황을 서술.
- 동일 범주의 [상위사건(사건범주)], [(하위)사건]의 경우 각 '사건'의 배경서술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함.

③ 내용

영역

- 원인 : 해당 사건과 관련한 직접 원인으로 범위를 좁혀서 서술.
- 전개 : [상위사건]의 범주에 해당하는 각 [일반사건]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요약 설명하되, 각 일반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결과를 중심으로 서술
- 결과 및 영향 : 사건의 결과와 영향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사건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따른 '의의'는 서술하지 않음. 피해 현황과 외부(=국제적) 반응 함께 서술

④ 인정

영역

- 인정단위(기관) : 정부기구 및 국회,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등.
- 인정 주요 내용 : 인정 기관에 의해 민주화운동 사건으로 결정, 심의, 재심결정된 내용
- 인정 심의일 : 해당 기관별 인정 심의 날짜 기입
- 인정 확정일 : 해당 기관별 인정 확정일 기입 (예시)「2.28대구학생시위」

인정단위(기관)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안전부 국무회의
인정 심의일	2009-12-29 2018-01-30
인정 확정일	2005-12-30 2010-03-12 2018-02-06
인정 주요 내용	<대구광역시 2.28민주운동사업 조례> 제정 (대구광역시조례 제3748호/2005년 12월 30일 제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의 제2조「정의」에 포함되어 민주화운동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음.

⑤ 기념

계승
영역

- 관련 법규 : 해당 사건 및 시설의 기념행사 등 현재적 기념계승의 법적 근거 기술
- 기념시설 현황 : 기념시설의 주소(소재지), 시설배치 현황, 관련 홈페이지 기입
- 기념단체 : 현재 기념계승 행사 주관 단위(기관, 단체, 개인 등) 기입
- 기념행사 : 주최단체(기관), 기념행사 시작 시점, 변동사항 등을 포함한 기념행사 내용 기술
- 법적 정부기구 진상 규명 : 법적 정부기구에 의한 관련 법규 및 그에 근거한 진실규명 현황 기술

⑥ 연계

영역

- 항목연계 · 관련인물: 핵심적인 주도자, 사망자, 부상자, 구속, 징계, 해고 등 피해자, 주요 참여자, 가해자(직접 가해자 및 권력 집행자). 핵심 주도자는 반드시 기술함
- 관련단체: 당시 해당 사건 관련 단체(해당 사건 주도 피해단체)만 서술
- 관련사건: 해당 사건과 연계된 주요 사건을 서술하되, 집필항목에 포함되어 [상위사건]과 [(하위)사건]으로 명시된 사건은 관련사건에서 제외

⑥ 연계 영역	자료연계 출처/URL : 연계(링크 등) 자료 소재 관리 단위 기술 유형 : 자료 유형(사진, 영상, 성명서 등) 자료내용 : 연계 자료에 대한 제목 및 설명(캡션 등)
각주 및 참고문헌	· 각주 표기는 본문에 인용된 1차 자료 중심으로 최소범위에서 표기 · 참고문헌 표기는 「원고집필기준-제4장 원고작성법」에 따라 표기하며 최대 10개를 넘지 않도록 함
⑦ 주기 영역	· 해당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영역별 서술에 포함 시킬 수 없는 내용 예) 「4.11제2차마산의거」의 명칭 둘러싼 현장의 논쟁 등
⑧ 기술 통제영역	· 집필자 : 집필자 이름 · 집필일자 : 원고 집필 날짜 · 원고 수정 일자 : 원고 수정 보완(1~n차)
열람 및 이용조건	· 공개여부 : 공개/부분공개/비공개 · 부분 공개 및 비공개시 집필자는 법률적 근거에 의거 해 이유 설명을 반드시 첨부
언어와 문자	한국어/영어 외 표기된 언어 선택

<그림2> 『민중화운동사전』 '한일협정조인·비준반대운동'메타데이터구조

한일협정조인·비준반대운동 [?]

박정희정권기 > 제3공화국기 민주화운동 > 한일협정조인·비준반대운동

가 + 가 - 📄 🗨 📁 🔄



대학생들의 한일협정조인반대시위

유형	사건
분류	학생 운동
영어표기	The campaign against the signing and ratification of the Korea-Japan Basic Relations Agreement
한자표기	韓日協定調印批准反對運動
발생일	1965년 2월 16일
종료일	1965년 9월 25일
시대	박정희정권기 · 제3공화국기 민주화운동 · 한일협정조인·비준반대운동
지역	전국

상위사건 - 축소보기

- 한일협정조인·비준반대운동

주요사건 + 더보기(5)

- 한일기본조약가조인규탄운동
- 4.13시위(3.31.-4.17.)
- 한일협정조인저지·규탄시위
- 한일협정비준반대운동(7월)
- '정치교수' 해직반대운동

배경사건 - 축소보기

- 한일협정 체결

단체 - 축소보기

- 한일협정비준반대대학연합체
- 조국수호국민협의회

개요 - 축소보기

1965년 한일 양국은 기본관계조약을 비롯한 여러 의제를 타결하고 한일협정을 체결했다. 학생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은 한일협정의 불평등성, 반민족성을 규탄하고, 협정 체결을 강요하는 미국을 비판하며 한일협정조인·비준반대운동을 벌였다. 이 운동을 통해 박정희(朴正熙) 정권의 반민족성, 반민주성이 폭로되었으며 민족주의가 고양되고 민주 세력이 결집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림3> 『민주화운동사전』 '3.15마산의거' 기념계승영역 구성

기념 계승 현황

- 축소보기

[관련법규]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7730호, 2002. 9. 1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7649호, 2005. 7. 29.)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074호, 2010. 3. 12.)
- 광주광역시 광주 3.15의거 및 4.19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광주광역시 조례 제4292호, 2013. 10. 1.)
- 경상남도 3.15마산의거기념일 지정에 관한 조례(경상남도 조례 제3017호, 2003. 12. 26.)
- 국립4.19묘지 규정(대통령령 제17668호, 2002. 8. 1.)

[기념 시설]

국립3.15민주묘지

기념 단체	3.15의거기념사업회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성역로 75
시설배치	민주의 문(탑), 정의의 상, 참배의 공간(참배단, 정의의 벽, 민주의 햇볕), 3.15기념관, 유영봉안소, 상징문, 기념사비

한국민주화운동 연구와 역사 대중화 모색

최근 학계 동향을 보면 전공을 불문하고 한국민주화운동 관련 연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에 2000년대 이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각종 과거사위원회, 관련 법률 제정 등으로 민주화운동 관련 사회적 합의가 확산되면서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인물, 사건, 단체들의 발굴은 계속 증가해 왔다. 5.18민주화운동과 같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아 온 대표사건의 경우 연구가 꾸준히 증가해 온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민주화운동 연구는 감소 추세에 있다. 역사학계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배출된 한국현대사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운동사 분야(노동, 사회, 민주화 등 포괄)는 총 140편 중 14편으로 10% 정도에 그치고 있다(오제연, 2022). 현재 민주화운동 관련 연구 경향을 보면 대체로, 서울/중앙, 남성/지도부 중심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민주화운동을 구성하는 지배구조(특히 80년대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며, 재권위주의, 민주화 이행 등 변화를 낳은 중대사건 이외에 개별 사건, 단체 활동 등에 대한 경험적 조사, 연구들도 시급한 실정이다. 민주화운동 연구 감소 추세는 전문 연구진의 인적 감소, 연구 인프라·활동 네트워크의 부재 등 다양한 원인에서 찾을 수 있겠으나 한국 민주주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고려한다면 역사 대중화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술연구의 활성화 방안’이다. 민주화운동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사학, 정치학, 사회학 뿐만 아니라 인류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분과학문과의 교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술연구지원사업 등 연구지원의 확대와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다루는 연구기관의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민주화운

1 이 글은 2023년 10월 25일 개최된 '2023년 KDF 민주주의학술대회' 「민주화운동사전 편찬 의의와 활용과제」 세션에서 발표된 글들을 요약정리하였다.

동연구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다. 민주화운동 대사건, 항쟁 중심의, 특정 집단, 계층만이 아닌 광범위한 사람들의 참여가 합당하게 운동주체로 조명되어야 한다. 예컨대 4월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빈민층'의 경우 참여동기와 방식, 기여도 등을 밝혀주는 연구가 필요하다. 학생운동 연구도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조직노선', 이념투쟁, 중요 인물, 시위 양상 등을 중심으로 서술해 왔는데, 운동에 참여한 절대다수 '학생대중'의 사고, 지향, 일상 등에 대한 구체적 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민주화운동 교육의 활성화'이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 사례를 보면 전남대는 2007년부터 '5.18 항쟁과 민주인권' 강좌 개설, 조선대는 교과목 '광주 항쟁과 민주사회' 개설, 호남대는 2008년 '5월 항쟁과 민주사회' 교과목 개설, 전남대는 2008년부터 전국 7개 대학이 참여하는 '5.18과 민주인권' 과목의 e-러닝 강좌를 개설해 운영해 오고 있다. 교육도 민주화운동의 단순한 학습이 아닌 인권, 평화 아젠다 등과 연계시키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민주화운동 관련 연구주체의 확산도 필요하다. 5.18민주화운동 등 중요 민주항쟁의 전개 과정, 특징을 해명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국제적, 정치적 배경과 맥락의 규명, 운동 주체의 형성과 관련 있는 생활사, 문화사 연구 등 다양한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주체의 확산을 위해서는 한국현대사, 한국현대정치, 사회, 경제를 다루는 기본 연구들도 민주화운동의 존재를 고려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역사 부문과의 연계"이다. 과거의 재현과 활용은 비단 학술 연구 차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박물관, 매스미디어(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문학 및 문화계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 확대가 대중화 효과를 높일 수 있다(영화 '박하사탕', '화려한 휴가', '변호인', '택시 운전사', '1987', '서울의 봄' 등). 이를 위해 민주화운동연구기관들이 공공역사 부문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중요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구축하는 『민주화운동사전』이 이러한 공공역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¹

참고문헌

- 고지수, "민주화운동사전 편찬체계 및 주요 개념", 『2023KDF민주주의학술대회자료집』, 2023.
- 김 원, "민주화운동사전 편찬의 학술적 의의", 『2023KDF민주주의학술대회자료집』, 2023.
- 오제연, "한국현대사 박사학위논문(2000~2021)의 현황과 대학원 교육", 『사림』, 82호, 2022.
- 정근식, 『"민주화운동사전" 편찬의 목표와 과제』, 『2023KDF민주주의학술대회자료집』, 2023.
- 정근하, "5·18 민주화운동의 지역성 극복을 위한 방안연구", 『한국과 국제사회』, 1권 2호, 2017.
- 홍석률, "민주화운동 연구를 위한 제안", 『2023KDF민주주의학술대회자료집』, 2023.

『민주화운동사전』 편찬의 학술적 의의와 역사 대중화 모색

발행일 2023년 12월 1일

발행처  민주회 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ikd@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